

배포일시 2025. 11. 11.(화) 14:40, 즉시 배포

담당자 손명수의원실 김종화보좌관 (02-6788-7254)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성명서 발표**

- 손명수의원총 공동위원장,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손명수·의원총)는 2025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번 성명서는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을 두고 2년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일 지자체의 재량권 존중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발표되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묘 앞에 140m 초고층 콘크리트 빌딩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해진 데 대해, 손명수·의원총 공동위원장은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임을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근거로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한 “더 이상 도시의 가치는 고층빌딩의 높이 같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그 도시만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 ‘소프트 파워’와 문화 콘텐츠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고 덧붙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등재 취소된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보호구역,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 등 3곳의 해외사례를 들며,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손명수·이원종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장 임기는 4년이지만, 세계문화유산 종묘는 4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존재할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였다.
- 아울러, 종묘 일대 재개발 구역에는 수십 년간 그 터를 지켜온 상인과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서울시에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종묘 일대를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육성하여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첨부]

1.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사진
2. 성명서 전문 1부 끝.

[첨부 1]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사진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성명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세계문화유산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야 할 절체절명의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이다.
-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철회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
- 콘크리트 수직을 덧대어 유네스코가 인정한 수평의 장중함을 훼손하지 말자. 초고층 콘크리트 건물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존중의 취지에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도 적법 판결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오세훈 시장은 종묘 앞에 140m의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번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진 재개발은 조례 ‘재개정’으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의무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도시의 가치는 고층빌딩의 높이 같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 도시만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 ‘소프트 파워’와 문화 콘텐츠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으나 훗날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보호구역,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 등 3건이 등재 취소된 사례가 있다.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요, 경쟁력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 콘크리트 수직을 덧대어 유네스코가 인정해준 수평의 장중함을 훼손하지 말자. 그런 콘크리트 고층 건물은 종묘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

특히, 종묘 일대 재개발 구역에는 수십 년간 그 터를 지켜온 상인과 주민들이 그곳의 일상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종묘 일대를 단순한 재개발 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육성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품격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발의 조정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서명운동> 등 필요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서울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세계문화유산 ‘종묘’는 4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존재할 것이다.

(구호)

①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훼손, 당장 멈춰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② 문화유산은 개발 아닌, 보전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③ 시대착오적 개발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재개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④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2025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손명수, 이원종